

법조계 “경제 수사 ‘어불성설’... 코드인사 관행부터 고쳐야”

경제수사 성격상 세부적 장치 필요
순탄치 않은 대규모 입법도 과제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공석 지적

청와대가 검찰의 직접 수사 분야를 경제·금융 등에 한정할 개혁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선 ‘모호한 수사 범위 재정립’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와대는 지난 14일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통해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경제·금융 등 특수수사에 한정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검찰 수사 권한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경찰에 대거 옮겨지고, 주요 사건의 1차 수사는 경찰이 맡는다는 내용이다.

쟁점은 ‘검찰의 직접 수사는 경제·금융 분야 등 특수수사에 한정한다’는데 있다. 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경제 수사는 고위층 비리 등 여러 문제와 얽히게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4일 춘추관 대브리핑실에서 현 정부의 국정원, 검찰, 경찰 등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발표 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형연 법무비서관, 김종호 공직기강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백원우 민정비서관, 조국 민정수석. /연합뉴스

되어 있다”면서 “수사 범위를 한정한다는 자체에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고위층 비리 수사와 경제 수사가 어느

지점에서 만나게 되면 공수처와 검찰 간 ‘교통정리’가 찾아질 수밖에 없게 된다. 법무부가 ‘공수처장이 중복 사건 이첩을

다른 수사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는 방안을 세웠지만 ‘경제 수사’의 광범위한 성격상 세부적인 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해 ‘기소권을 가진 검사로서 다른 기관에서 ‘코드 인사’의 지휘를 받게 돼 사실상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법무부는 국회 소속 추천위원회가 공수처장 후보자 2명을 추천하고, 여야 협의로 1명을 선출해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마련해왔다.

또 다른 장애물은 ‘순탄치 않은 입법’이다. 청와대의 발표가 실현되려면 수사기관 운영 방식을 다룬 형사소송법 등 현행법 전반을 뜯어고치는 대규모 입법이 진행돼야 한다.

힘로는 예고돼 있다. 이번 개혁안 발표 직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진정성 있는 개혁안”이라는 입장을 낸 반면, 자유한국당은 “권력기관을 수족처럼 부리겠다는 개악”이라며 반발했다.

이처럼 공수처 설치가 불투명한 상황

에서 청와대가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 자리를 1년 넘게 비워두는 상황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별감찰관은 이석수 전 초대 특별감찰관이 박근혜 정부 시절인 2016년 9월 사퇴한 이후 공석으로 남았다.

이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는 “언제 생길지 모르는 기관을 기다리느라 현행법을 집행하지 않는 점은 문제”라며 “그것이 대통령 친인척 수사는 누가 언제 하느냐. 특별감찰관은 언젠가 공수처가 생기면 그때 정리하면 될 일”이라고 비판했다.

각 수사 기관장이 정권의 뜻대로 움직이는 구조 때문에 이번 개혁안을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정기관 출신 법조인은 “칼자루 잡은 사람이 바뀌어야지, 흔들리는 칼을 고치겠다는 것이 맞느냐”며 “제도도 바뀌어야 하지만, 공수처장 임명 지연 같은 태도로 볼 때 ‘(전정권을) 욱 하면서 배우는 꼴’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이법중 기자 joker@metroseoul.co.kr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왼쪽)와 김성태 원내대표. /연합뉴스



한국당 ‘투톱’, 전방위 대외 공세

(홍준표·김성태)

자유한국당이 문재인정부의 권력기관 개혁방안, 개헌, 경제정책 등 사실상 거의 모든 정책에 대해 전방위적인 공세를 펴고 있다.

특히 당내 ‘투톱’인 홍준표 대표와 김성태 원내대표는 각각 원외와 원내에서 강도 높은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

김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개헌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니까 민정수석이라는 자도 대통령을 받받고 있다”면서 “대통령의 심복이 권력기관 구조개혁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에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며 지난 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발표한 권력기관 개혁방안 관련 입장을 밝혔다.

김 원내대표는 “(권력기관 개혁안은) 대의기관인 국회를 거들떠보지 않겠다는 일방통행식 국정운영에 함몰된 청와대 참모진의 꼴불견”이라고 지적하며 “문 대통령은 참 재미있는 분이다. 오늘 헌법개정·정치개혁 특위도 첫 회의를 시작하는 마당인데 사법개혁이든 개헌이든 내 마음대로 결정하겠다는 이 태도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회를 패싱하면서 사법개혁과 개헌에만 몰입하지 말라”며 “대통령과 청와대 수석은 국민을 뛰어넘겠다는 불쌍사나운 짓을 즉각 중단해주시기 바란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개헌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개헌은 절대적으로 국민의 뜻”이라며 “(6월 지방선거와 동시에 하는) 쪽정기, 결다리 개헌을 반대하고 국민과 함께하는 ‘알짜 개헌’을 이룰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회 차원의 개헌안 합의만 이뤄지면 12월 이전에도 ‘국민개헌’ 투표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정부·여당이 목표로 하고 있는 6·13지

방선거시 동시 개헌 국민투표에 대해 재차 반대 입장을 내비친 것이다.

지난 8일부터 전국 순회 신년인사회를 진행하고 있는 홍 대표도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부산시당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문재인정부에 대해 강도 높은 발언을 이어갔다.

홍 대표는 문재인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좌파사회주의 정책”이라며 “좌파들만 전국인 세상을 만들고 있다. 청년들을 위한 희망의 사다리는 모조리 걷어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청년들이 희망을 잃고 가상화폐 쪽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데도 그것마저 없앤다고 한다”며 “2월 말이 되기 전까지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혁신을 새롭게 정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북정책과 관련해서도 그는 “정부가 북핵을 해결하는 데 주력하는 게 아니라 북핵 동결에 주력하겠다고 한다”며 “우리는 김정일의 북핵을 엮고 불안 속에서 북한의 공갈에 돈을 갖다 바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홍 대표는 개헌과 관련해서도 “(자유한국당은) 헌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데도 마치 지방분권에 반대하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면서 “헌 헌법에 지방분권 제도가 명시돼 있다. 자치입법·조직·재정권만 법률로 개정하면 된다”며 “(그런데도) 현 정권은 헌법에 지방분권이 명시돼 있지 않은 것처럼 일부 시민단체를 동원해 악선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이런 식으로 나라를 이끄는 것은 거짓말도 계속하면 참말이 된다는 ‘괴벨스(독일 나치 정권 선전장관)식’ 국가운영”이라면서 “한 달 전 부산·울산·경남 민심 조사에서 우리가 상대 당을 이기고 있었는데, 여론조사 기관은 조작된 여론만 퍼뜨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창원 기자

개헌·정개특위, 첫 회의부터 ‘힘로’

민주당 “개헌 노력, 국민과의 약속”
한국당 “대통령이 가이드라인 제시”

여야가 개헌 관련 시기·정부형태 등 주요 쟁점을 두고 15일 열린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 첫 회의부터 격돌했다.

우선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지난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개헌 관련 발언을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안상수 의원은 “대통령이 지방선거에서 합의하기 쉬운 부분부터 개헌하고 합의하기 어려운 권력 구조는 차후에 할 수도 있을 것처럼 말했는데 본말이 전도됐다”며 “국민의 열망을 왜곡해서 이해하고 계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나경원 의원은 “국민의 뜻은 ‘제한적 대통령제의 종식’이라고 생각한다”며 “(개헌 관련 필요시 정부형태를 제외하고 논의하고자 하는 것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밝혔으며, 김성태(비례) 의원도 “개헌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주도해야 하는데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고 꼬집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개헌안이 3월 중에는 발의돼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면서 “지방선거와 개헌 국민투표 동시 실시는 국민과의 약속”이라며 “6·13지방선거에서 동시 개헌 국민투표” 공약 이행 입장을 재차 밝힌 바 있다.

이같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자유한



15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 특별위원회 첫 회의에서 위원장과 각당 간사들이 얘기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간사, 김재경 위원장, 자유한국당 주광덕 간사, 국민의당 김광영 간사. /연합뉴스

국당 특위 위원들은 당시 국회 개헌특위가 시작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헌 방향과 일정표를 제시한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정중섭 의원은 “민주화 이후 모든 역대 정부가 실패하고 대통령도 불행한 길을 걸었다”며 “여당 의원들은 야당 시절 ‘대통령제가 문제’라고 심각하게 문제를 제기했는데 왜 지금은 침묵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 특위 위원들은 지방선거시 동시 개헌 입장을 밝히며, 자유한국당을 압박했다.

박주민 의원은 “자유한국당은 탄핵 국면에서 신속하게 개헌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며 “개헌특위가 집중적으로

논의하면 지방선거에서 개헌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밝혔다.

박완주 의원은 “이번 지방선거와 동시에 개헌을 하려는 노력은 국민과 약속이기에 함께 해나가겠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며, 윤관석 의원은 “개헌에 대해 논의만 하고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국민이 신뢰를 할 수 있겠나.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형태와 관련해서도 최인호 의원은 “대통령제가 국민적 지지를 받고 있는 만큼 협치와 분권을 이룰 수 있는 대통령제로 가는 것이 생산적”이라며 “대통령제하에서 인사권·예산권을 어떻게 분산하고, 감사원의 독립 기관화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창원 기자 mediaeco@

김동연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

정부가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 2만개 보급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5일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도입한 인천 소재 포장재 회사 ㈜연우를 방문해 기업인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스마트공장의 보급·고도화를 지속하는데 정책의 역점을 두고 기업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2만개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사진)은 15일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도입한 인천 소재 포장재 회사 ㈜연우를 방문해 기업인 등과 간담회를 갖고 “정부는 스마트공장의 보급·고도화를 지속하는데 정책의 역점을 두고 기업 스스로 혁신할 수 있는 생태계 조성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며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2만개 보급하겠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0일 신년기자회견에서 올해 연말까지 2000개의 스마트공장을 새로 보급해 국민들이 4차 산업혁명과 혁신성장의 성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스마트공장 확산을 위해 올해 3300억원을 새로 지원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정부가 스마트공장 보급에 필요한 소프트웨어 산업의 성장도 함께 촉진할 것이며 다음 달 중소기업벤처부를 중심으로 스마트공장 보급을 확산할 추진 방안 발표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김 부총리는 간담회에 앞서 연우의 패키징 센터를 방문해 로봇을 활용한 제품 생산 과정 등 이 업체가 도입한 스마트공장 시스템을 둘러봤다. 그는 정부가 혁신성장의 한 축으로 혁신 창업을 중시하고 있다며 기중현(60) 연우 대표가 35년 전 20대 중반의 나이로 창업해 훌륭하게 기업을 성장시켰다는 것에 감명받았다고 공감을 드러 본 소감을 밝혔다. /김승호 기자 bada@